주민들이 동네돌며 '오월영화제' 연다

5·18 33주년 기념 '洞행사위' 주관

'26년' '지슬' 아파트·주택가서 상영

영화 '26년'·'꽃잎', '지슬'…. 이는 '5·18 민중항쟁'과 '제주 4·3 사건'을 그린 영화들이다.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동네 주민들이 광주·제주의 아픈 역사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오월 영화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동네 주민들이 주축이 돼 기획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2일 광주지역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동(洞) 행사위원회'(이하 동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초부터 5·18 민중항쟁과 제주 4·3 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을 다룬 영화제를 연다.

영화제에 참여하는 동은 모두 15곳. 동 행사위원회는 15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가 등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영화 상영을 할 예정이다. 상영은 아파트 회의실 또는 주택가 경로당 등에서 할 계획이다.

동네 주민들이 주관해 여는 오월 영화제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민주화의 토대가 된 5·18 민중항쟁 등을 주제로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과거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 위원회가 옛 전남도청 인근에 별도의 영화관을 마련해 노동·여성·인권 등을 주제로 영화제를 해왔었다.

기존엔 시민들이 5·18과 다소 동떨어진 주제의 영화를 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찾아가야했다면, 올핸 동 행사위원회가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기간 내내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화제를 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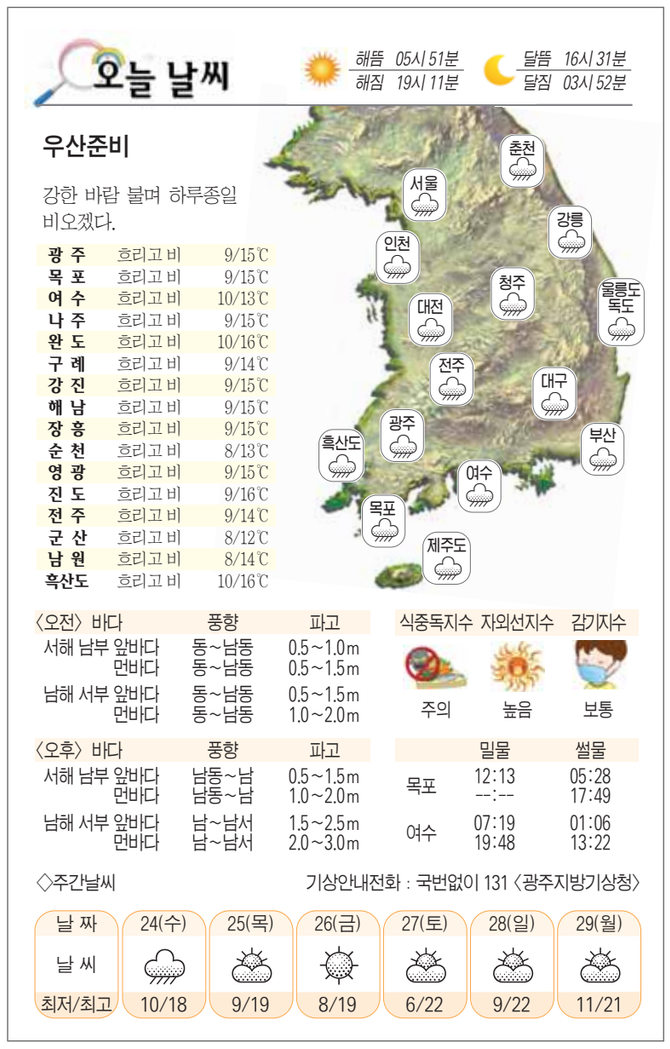
동 행사위원회는 이번 영화제에서 '26년'과 '지슬'을 상영할 예정이다.

현재 동 행사위원회는 영화 제작사들과 저작권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오월 영화제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져 가는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광주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형식의 5·18 영상물도 동시 상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영화제가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초등 학급당 학생수 '전국 최저'

20명 채 안돼…5명 이하 '미니학급' 106개교나

광주 수완지구 과밀학급 집중…학교 신설 절실

전남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채 못돼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았다.

22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학생 재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5.2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을 웃돌았다. 이는 경기(27명)·서울(25.5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며,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다.

반면, 전남지역은 평균 1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7.2명이 차이가 났다. 강원(20.3명)·전북(21.3명) 등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방의 학생 수가 적었다.

기초단체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25.5명)·광주 서구(25.3명)·남구(25명)·순천(24.3명)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신안은 10명에도 못 미치는 8.2명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내 학교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과밀학급이 많아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장덕초 35.7명, 봉산초 34.3명, 선창초 33.5명, 수완초 33명 등이다. 또 삼육초(33.3명), 송원(32.6명)·살레시오(31.3명) 등 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광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는 광주동초 충효분교 3.3명 등 총 6개교 였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 왕운초가 32.6명, 무안 남악초가 31.3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었다.

학급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인 미니학급은 106곳으로 전체 497개교의 21.3%에 달했다. 강원(100개교), 경북(85개교), 경남(64개교) 등에도 '미니 학급'가 많았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1명으로,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22일부터 학교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0년 현재 OECD 평균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1.2명, 중·고등학교는 23.4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지난해 광주·전남 시군구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단위:명

◇광주

시군구	학급당 학생수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광산구	26.7	22.1
서구	25.3	21
남구	25	19.5
북구	24.2	19.8
동구	22.8	18.6

◇전남

시군구	학급당 학생수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목포시	25.5	22.4
순천시	24.3	20.9
광양시	23	19.6
여수시	22.3	18.8
화순군	19.8	16.5
무안군	18.7	16.6
영암군	17.9	15.7
나주시	17.8	16.2
고흥군	16.2	14
해남군	15.9	14.4
영광군	15.8	13.6
장성군	15.8	14
곡성군	15.5	13
함평군	15.3	13.7
완도군	14.8	12.8
장흥군	14.8	12.9
강진군	14.7	12.3
구례군	13.4	11.9
담양군	13.3	12.1
진도군	13.1	11.3
보성군	12.7	10.5
신안군	8.2	7.3

광주 학교자치 조례

교육부, 대법에 제소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다. 교육부는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재의결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재의결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동시에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에 이 조례를 제소할 것을 지시했으나, 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과 재의결을 거친 만큼 지역 여론과 화합을 이유로 제소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 조례를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치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하는데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자치기구 구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면 자칫 조례를 어기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직접 제소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r

경기·전북 교육감에 '學暴징계' 이행명령

교육부, 내달 3일까지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과 관련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지역 교육감에게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이행 대상은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자로 보낸 이 행명령서에서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중 4명은 감봉 1~2개월, 2명은 견책, 24명을 불문경고키로 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19명에 대해서는 16명은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